

정청래 후보, 충청 · 영남 ‘주도권’

민주 차기 당대표 순회 권리당원 투표

충청 62.77% · 영남 62.55%로 압도적 1위 기록
박찬대 후보는 충청 37.23% · 영남 37.45% 얻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충청 ·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주도권을 잡았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충청권(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에서 62.77%, 영남권(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에서 62.55%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찬대 후보는 충청권에서 37.23%, 영남권에서 37.45%를 얻었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충청권은 10만 8,802명 중 5만5,988명이 투표에 참여해 51.4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영남권은 9만9,642명 중 6만5,332명이 참여해 65.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전체 선출 과정에서 55%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의원 투표 1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와 합쳐 최종 당대표가 결정되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정 후

보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정청래 후보는 “검찰 · 언론 ·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세웠다.

특히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한다. 국회가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다”며 협력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 할 당 대표는 달라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능해야 한다”며 실무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사진 왼쪽부터) ·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절 계엄 · 탄핵 정국을 이끈 경험과 3특검 추진, 각종 국정조사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검증된 능력을 어필했다.

충청 · 영남권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과연 이 모멘텀을 다른 지역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박찬대 후보가 어떤 반전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권리당원 투표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 후보가 이미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이지만, 선거는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기에 더 주목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 김재훈 기자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 민주 김의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20일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 제22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한 지 1년여 만에 국정에 복귀한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자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언론 · 행정 · 입법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미디어 전략에도 강점을 보일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역 협력과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의 중심으로 키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당내 대표적인 ‘친명(親明)’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추진력을 더하는 동시에, 향후 군산 흥선 구도에도 변화를 예고하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21일 입실 치즈테마파크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전북권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번 ‘국회의원 용혜인의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3시 입실 치즈테마파크 지점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입법간담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현재 발의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농어촌기본소득 연내 제정 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유관 단체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용 대표는 이날 오후 입실 출신의 김철호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과 함께 입실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용혜인 대표는 입법간담회를 마친 후 전주를 방문해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기본소득 시민 강연을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순창지역 수해 피해상황 점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민생지원팀이 순창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공>

‘윤석열 구속기소’ 내란특검, 외환죄 수사 주력

사후 계엄 선포 문건 폐기 · 단전단수 의혹 수사도

재구속 후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실적이 없는 추가 조사 시도 대신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특검의 구상이다.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모 관계가 적시된 사건들도 순차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하면서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미 군 관계자 다수가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지난 14일 국방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하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지면서 ‘우리

군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등에게는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외환유치죄에서 ‘외국과 통화(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부 관계자들이 계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진술과 물증을 찾는 작업이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한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라도 조사석에 앉히겠다는 게 특검의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모 관계가 적시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사후 계엄 선포 문건 작성 · 폐기 혐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언론사 단전 · 단수 지시 혐의 등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들을 불러 조사한 특검은 추가 수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 · 단수 지시 의혹도 특검의 결론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고 해당 지시가 지휘 계통을 따라 하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직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직권 남용 및 내란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지난해 1월 18일 내란우무머리 혐의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이다. /이만호 기자

“프랑스에 민주 대한민국 복귀 알렸다”

민주 한병도 의원, 이재명 정부 첫 특사단 활동 성과 밝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해 거둔 성과를 밝혔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에 파견된 첫 특사단으로서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프랑스 특사단은 김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민주당 한병도 · 천준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사단의 핵심 성과는 프랑스 외교수석과의 면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 의원은 “프랑스 외교수석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며 “이는 신정부의 외교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정계 주요 인사들과 광범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우주, 원자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의원은 “프랑스 정계에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주, 원자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는 장기적인 한-프랑스 협력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내년 한-프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두루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 의원은 이번 특사단 활동의 의미를 국제적 위상 회복 차원에서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워나갈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최초 태권도 명예 9단’

문승우 도의회 의장
“국가 위상 높이는 매개체 역할 할 수 있도록 응원”

“태권도를 통해 우리 전북과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 되도록 태권도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내 최초로 태권도인의 최고 영예인 명예 9단이 됐다.

문 의장은 19일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세계태권도 본부(국가원장 이동섭)로부터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태권도 명예 9단’ 증을 수여받았다.

문 의장은 1997년에 공인 7단 승단 심사에 합격한 태권도 마스터이다.

중학생때 자신의 수련을 위해 태권도를 시작한 문 의장은 고등학교 때 공인 3단을 획득한 뒤 자연스럽게 태권도 전공 체육교사를 꿈꾸었다.

문 의장은 6년 동안 군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고 이후 개인 도장을 마련해 고향 후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전북도민체전때는 선수단 총감독

을 맡았으며, 군산시 태권도 협회장 등도 역임했다.

문 의장의 태권도 사랑은 도의회이 된 이후에 더 타올랐다.

‘국가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촉구 건의안’ 제안은 물론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무주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인들이 모여드는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의장직을 맡은 이후에는 도의회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류문화, 전북소개와 더불어 태권도 홍보도 빼놓지 않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국기원이 인정하는 최고의 단인 공인 9단에 도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명예 9단을 받고 보니 한없이 기쁘다”며 “태권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심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 제4기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 - 김명지 의원 · 부위원장 - 임종명 의원



김명지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의원을 제12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을, 부위원장에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한정된 재원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



임종명 부위원장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결산사항을 통해 예산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명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협치의 과정에서 출범이 다소 늦어진 만큼 더욱 빈틈없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예결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